

자료제공 : 2026. 6. 18.(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참고자료

담당 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영동대로복합개발
추진단장

권순환

6438-2808

사업총괄과장

박노성

6438-2810

서울시, MBC 허위·왜곡 보도 관련 6월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 5.15~6.3 기간 MBC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손해배상(3억 원) 청구
- 해당 보도로 인한 시정 신뢰 훼손, 시민 불안감 조성 및 행정력 낭비에 대한 법적대응 조치

- ☐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6월 17일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 시는 해당 보도로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시민 불안이 증폭되었으며, 현장 대응 업무 가중과 행정력 낭비로 인해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손해배상금 3억 원과 함께 MBC ‘뉴스데스크’ 및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했다.
- ☐ 시는 MBC가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3주간 동일 사안을 총 76건 보도하며 ① 시공 오류에 대한 책임 주체를 왜곡하고, ② 공사 현장 균열의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연관 짓고, ③ 정상적 행정절차를 고의적 은폐로 매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붙임 참고)

- 특히, 시는 해당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진영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악용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는 공정성을 저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사안인 만큼, 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 시는 이번 조치가 언론의 정당한 비판 기능을 제약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로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시정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된 것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정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시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 시공 오류에 대한 책임 주체 왜곡

○ 보도 내용

- 서울시 입찰문건 (공사입찰설명서) 상 ‘시공감리 책임자’ 오세훈
- ‘수요기관은 서울시를 의미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당연히 오세훈 시장’
- ‘공사는 물론 감리도 모두 서울시가 최종책임자’ 등

○ 위법 사항

- 해당 공사의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 감리는「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등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을 담당하는 삼안임.
- 공사입찰설명서 상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라고 명백히 명시
- 해당 공사와 같은 대형 공사의 발주·시공, 감독·안전 점검 등 구체적·기술적 권한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3 내지 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0조」 등에 따라, 독립 사업소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보도

2) 공사 현장 균열 원인 왜곡

○ 보도 내용

-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철근 누락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 외부전문가는 (중략) ‘실제 철근 구조가 균열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등

○ 위법 사항

- 2026.1월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 자문위원 12명이 실시한 합동점검 및 5월 외부전문가 20명이 참여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해당 균열은 철근이 누락된

기둥이 아닌 천장과 벽체에서 발생한 것이며, 그 원인 역시 콘크리트 건조 수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비구조적 현상으로 안전에는 이상이 없음이 확인됨. 그러나 객관적인 점검 결과를 외면하고 균열의 인과 관계를 왜곡하여 보도

3) 정상적 행정절차를 고의적 은폐로 매도

○ 보도 내용

- 6회 이상 대면·현장 점검에도 서울시는 ‘입썩담’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의도적으로 반년간 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
- GTX 철근 누락 알고도 15번 만나 ‘침묵’ 고의적으로 은폐? 등

○ 위법 사항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025.11.10. 현대건설 및 삼안으로부터 시공 오류를 보고 받은 직후인 11.13부터 총 6차례에 걸쳐 문서로 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관련 사실 통보하였음
- 2022년부터 서울시 모든 공사 현장에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으로, CCTV로 공사현장이 상시 기록되어 시공오류를 은폐하는 것은 불가능한 체계임
- 이처럼 정상적인 행정절차 진행과정과 투명한 현장 관리시스템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보고 지연 및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악의적으로 보도